

# 尹, 정치·경제인 등 45만명 설 특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김기춘·김관진 등 정치인 7명...SK 최재원 회장 등 대기업 임원 5명 버스 등 운전 종사자도 행정제재 감면...소액 연체자 신용 회복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단행한 설 특별사면은 '민생'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직접 특사 기준을 설명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네 번째인 이번 사면 대상에 정·재계 인사들은 줄었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제재 감면 조치가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버스·택시·화물 운전 종사자와 영세 어민, 식품 집객업자 등 45만5398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으며, 소액 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등에 종사하는 식품 집객업자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거 특별감면하는 한편, 정치인이나 재계 관계자 사면은 최소화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93명을 사면했다. 이후 2023년 새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이 사면됐으며, 같은 해 8월에는 2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행정제재 특별감면대상자 외에 정치인·대기업 인사 등에 대한 특사는 980명에 그쳤다. 여기에는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 그룹 수석부회장, 구분상 LIG 회장 등 대기업 인사 5명이 포함됐다. 이들 소수를 뺀 사면 명단에는

중소 상공인 등이 집중적으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민생을 강조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핵심 인사들이 명단에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김 전 실장의 경우 1939년생으로 고령인 데다 이미 1년 6개월간 복역했고, 사건 관련자들이 이미 사면받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역시 장기간 수사와 재판 등을 받았고,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감정원·안광환 전 MBC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4명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현 정부의 방송 개혁 작업에 중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공관위 구성하자”

국회서 기자회견...이준석 “반대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6일 제안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세력이 대통합에 합의한 후 다 같이 통합 공관위를 꾸리자고 했다. 이들은 "축박한 일정을 고려해 오늘 중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고 구체적 협의를 위한 공개 회동을

내일 오전부터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식으로는 ▲통합공관위의 지역구 후보·비례대표 후보 통합 심사 ▲비례대표 후보 개방형 경쟁명부제 방식 채택 ▲40대 이하 국민패널 구성을 통한 킷오프(경선 배제) 심사 등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제3지대) 네 그룹이 모두 화답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중 세 그룹만 한다고 하면 세 그룹부터라도 먼저 공개 논의를 시작하고 개문 발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3지대 통합공관위' 제안에 대해 "당원과 시민에게 공천권을 드리자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제안"이라고 평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지역불출마 등 전략적 선택과 지지율 추이, 당선자를 최대한 배출하기 위해 비례 말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제안한 안에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며 "정치개혁을 내세우는 세력들이라면 크게 거부감을 가지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세력이 빠르게 입장을 밝히고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총선 브리핑

## 송갑석, 지방소멸 대처 '메가시티 지원법' 발의

###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

4월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송갑석 국회의원(민주·광주 서구갑)은 6일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추진된 4축 메가시티를 비롯해 메가서울 공약이 지닌 한계점은 그 방식이 행정 통합이라는 데 있다"며 "이미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사·도 간 행정 통합은 해당 사·도 지방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 설득 과정이라는 난관을 넘어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별법은 메가시티의 권한과 위상, 행정·재정적 특례규정 등을 부여해 실행력을 갖추도록 했다.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좌초되거나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메가시티지원위원회 설치 ▲메가시티 구성 지자체의 의회 의원으로 '메가시티 의회' 구성 ▲메가시티 의회는 메가시티 구성 지자체 단체장이나 제3의 인물을 메가시티 대표 단체장으로 선출 ▲중앙·지자체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기구가 광역사무 관장 등을 명시했다. 특별법이 통과할 경우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충청지방정부연합, 충남 베이벨리 메가시티, 동해안권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체인 해오름동맹, 호남초광역경제공동체(RE300), 전북·전남·광주 모빌리티 블록 등이 메가시티로 지정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박혜자 “공공기관 지역 인재 50% 채용법 추진”

###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

4·10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한 박혜자 예비후보는 6일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만들었던 지역균형 인재육성법 시즌 2를 추진해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고 지역 인재 유출 방지로 지역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광주권 대학이 지난해 지역대학 집중 육성을 위한 글로벌 대학에 모두 탈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이같은 공약을 내놨다. 그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지역 인재를 50% 이상 채용하는 지방대학·지역균형 인재육성법 시즌 2를 만들겠다"며 "의과대학과 로스쿨,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인공지능(AI)과 반



도체학과 정원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말했다. 그는 또 광주주공항공 이전 주변 지역에 직·간접 지원 방식 검토와 영산강부터 황룡강변으로 이어지는 역세권 수변지역 및 군공항에 들어설 공원부지를 연계한 생태시민공원 조성 등을 제안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방소멸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 전문가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khn@

## 안태욱 “AI 기반 첨단 산단 조성 일자리 창출”

###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

안태욱 국민의힘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는 6일 "광주지역 경제 발전 비전인 AI(인공지능) 기반의 ICT(정보통신), IoT(사물인터넷), 미래자동차, AD(자율주행) 등 첨단 융복합산업 산업단지를 조성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4·10 총선 광주 광산을 출마 선언을 한 뒤 공약 발표를 했다. 안 예비후보는 '실용과 합리, 부강한 광주를 위해'라는 문구를 내걸고 광주발전 비전을 위한 '3대 정책 공약'과 정치 혁신 실천을 위한 '3대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 공약으로는 ▲AI 중심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산업 투자촉진지구 육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기반 문화·관광특구 지정 ▲하남산단 기회



발특구 지정·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발표했다. 혁신 공약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각종 특권 포기 ▲세비 60% 반납 ▲주민 소환제 실천 등을 약속했다. 안 예비후보는 "당료와 정당 정치의 경험, 인맥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창출, 시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정책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참된 일꾼을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한나라당 중앙당 정책위 문화관광위원회 심의·전문위원, 국회정책연구위원(이사관), 새누리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TBN광주교통방송 사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